여야 내주 국방·외통위 열어 '北 무인기 사태' 논의

외통위 17일·국방위 일정 논의중
주호영 "현안질의 동의 할 수 없어"
이태원 국조 내주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다음주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열기로 했으며, 국방위는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에 국방위, 외통위를 열어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와 외통위 개최를 요구해 왔고 해당 상임위와 상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다음 주 국방위와 외통위를 각각 따로 열기로 했다"며 "청문회 형식은 아니고 현안 질의로 하되, 필요한 경우라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불러서 질의하자는데 여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은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서 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방위 개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19일에 열자고 해서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국방위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 관계자를 부르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특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유족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다음 주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치면 모두 종결된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녹사평 추모관도 방문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사고 원인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인 17일까지 특위에서 보고서 의결을 하면, 본회의 의결은 17일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2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연대 세력화에 맞불 김기현, 오세훈과 15일 회동

국힘 전대 '친윤' 세몰이 광폭행보
광역지자체장 만남도 일정 조율중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친윤(친윤석열)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오는 1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당권주자들 가운데 시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과 오 시장이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5일 오후 함께 막걸리를 마실 예정"이라면서 "우리 당 단합과 가야할 방향, 수도권 현안 등에 대해 오 시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과의 만남을 위한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대 레이스 초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를 띄우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주자임을 각인시켜왔다.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까지 '시도지사 연대'를 통해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을 '대세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의원 등 지역 정가의 모세혈관 조직을 관장하는 만큼, 당심 향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도지사들 지지를 통해 전당대회 적극 투표층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당내 수도권과 중도 표심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전대를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 중 오 시장과 가장 먼저 손을 맞잡는 것은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내세우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김오(김기현·오세훈)연대'로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안·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면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김장연대'를 평가절하해 왔다. 각각 울산과 부산이 지역구인 김기현·장제원의 연대로는 수도권 승리를 이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흘째 붕 뜬 나경원 사의 표명…尹 무응답 속 해석 분분

시간끌기로 당 대표 출마 막기?
반려도 수리도 전대 개입 비판 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이 허공에 '붕' 뜬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한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벌써 사흘째 사실상 '무반응' 상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한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리 또는 반려 여부를 포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분위기에 여러 가지 해석과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한 것은 맞지만, 실물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반려' 또는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은) 장관급의 정무직 공직자"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또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사직서 제출 등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에서 "비상임 위촉직의 경우 사의 전달로 불필요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간극이 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자체를 부정하며 발을 묶어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나 전 의원은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다수가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이 출국 전에 나 전 의원 사의의 건을 매듭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의 수용 또는 반려가 각각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시사하는 바가 다른 만큼,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간 끌기' 전법을 취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다시 '잠행 모드'로 돌입했다. 예정됐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등 일정도 취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2주전보다 3% 올라 37%

NBS…부정평가 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올라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8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p) 오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내린 2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 응답자가 37%, 반대한 응답자가 50%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